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2. 6. 27.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6월 27일(월) 14:00~17:43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이 명 순 위 원

송 창 영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2년도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17호 『증권선물위원회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118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

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19호 『하나금융투자(주)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는 금융투자회사에 재직하는 과정에서 자기명의의 계좌로만 주식거래를 해야 되지만 배우자와 자녀의 계좌에 관여한 적이 있음. 임직원 주식매매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행위가 어떤 탈법적인 의도나 목적 또는 계획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 배우자의 계좌는 배우자가 결혼하기 이전에 직접 개설하여 관리해 왔었던 계좌임. 배우자는 증권 관련된 자격증이 있었고 배우자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이용하던 계좌였음. 자녀 명의의 계좌 역시 자녀 저축목적으로 개설되었던 것임. 배우자 관련하여 운영되던 계좌를 제가 몇 차례 주문을 하다가 횡수가 좀 늘어났고 결국 습관적으로 계좌 매매를 하면서 잘못을 행하게 되었음. 저는 20년이 넘는 오랜 기

간 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 일해 왔으며, 증권시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은 바도 있음.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매매를 해야 되는 잘못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상기 위반사항으로 인해서 이미 해고를 비롯한 중징계 이상의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동안 증권시장 발전에 기여했던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주시기를 바랍.

○ (위원) 문제가 된 계좌에 진술인께서 자금을 직접 입금하지 않으셨는지?

▶ (진술인) 처음에는 배우자 자산이었지만 제가 자금 입금을 한 적이 있음.

○ (위원) 자금 입금을 언제 어느 정도 했는지?

▶ (진술인) 배우자 증권계좌를 입·출금 계좌처럼 같이 사용을 하면서 입금과 출금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함.

○ (위원)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계좌에 본인이 자금을 입금해서 그 입금된 자금으로 주식 거래를 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시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참여자) 방금 말씀하신 그 자금이 진술인 본인 소유의 자금이라는 사실도 인정을 하시는 것인지?

▶ (진술인) 진술서상으로는 원천적인 자금 자체가 배우자의 자산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음. 이후 저의 자금도 계좌에 같이 섞여서 거래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해고되고 벌금 받은 것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혐의사항이 다른 것인지?

- (보고자) 벌금형 선고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자기명의로 매매해야 되는 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형 약식기소로 1,000만 원이 선고된 것이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자기명의로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매매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기에 증선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

○ (참여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보면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도 이와 같이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는지?

- (보고자) 과태료도 있음.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벌금은 제1호 위반이고 과태료는 제2호와 제3호 위반으로서 동일한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위원) 보통 이러한 위반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1호 위반으로 형사벌, 제2호 위반으로 행정제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인가요?

- (보고자) 임직원 매매 실명거래 위반인 경우 모두 형사벌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는 직무관련 정보 위반사항으로 검찰에서 기소하면서 그것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제1호 위반에 대해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했던 것임. 일반적인 임직원 매매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인 행정제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본 건 대상자가 현재 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 절차가 현재 이중으로 나뉘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재대상자에게 절차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것이 현재 대리인 의견의 가장 첫 번째임. 두 번째로는 제재대상 사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음. 제재대상 사유는 제재대상자가 배우자의 명의 계좌를 사용해서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현재 재판에 기소가 되어 다투고 있음. 검찰에 근거가 되는 증거들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또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 사실임. 그 외에 주식 거래된 종목들을 보면 제재대상자가 직접거래를 했다고 하기에는 낮은 종목들이 많고 대형주 위주의 종목이었음. 제재대상자는 배우자가 ETF나 펀드

등에 가입을 하겠다고 하여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제재대상자가 직접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했다고는 볼 수 없고 당시 제재대상자의 의사도 아니었음.

▶ (진술인) 제재대상자 핸드폰에서 발견된 공인인증서는 은행공인인증서로서 증권거래가 불가능한 인증서임. 그리고 제 핸드폰에 나와 있는 배우자의 OO증권 모바일 화면 캡처(capture)는 주식 거래가 끝나고 나서 서너 달 뒤에 잔고가 전혀 없는 화면을 배우자 핸드폰에서 캡처(capture)하여 저한테 보낸 것임. 인증서 부분과 제 핸드폰에 나와 있던 캡처(capture) 화면 두 가지 모두 다 금감원이나 검찰에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사실관계가 좀 다름.

- (보고자) 지금 진술인이 얘기하는 공인인증서와 캡처(capture) 화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 검사수단의 한계상 확보할 수 없어 진술인이 제출한 검찰조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작성한 것임. 다만, 000씨의 배우자 명의로 거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경우 과거 주식 거래를 한 경험이 없는 점, 그리고 배우자의 은행계좌로 자금을 송부하였고 바로 그 당일에 배우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점, 그리고 주식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 ETF 거래를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종목을 거래한 것에 대해서 저희 감독당국은 합리적으로 이 부분은 과거부터 거래를 해온 000씨의 주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

○ (위원) 금감원은 배우자께서는 과거 주식 투자를 해보신 적

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인지?

▶ (진술인) 맞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결혼 이후에는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계좌로 보내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진술인) 2억 3,000여만 원 정도임.

○ (위원) 배우자 명의로 2억 3,000여만 원을 보내주고 그전에 전혀 주식을 거래하지 않으셨던 배우자께서 그날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진술인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거래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어떤 종목을 사라고 투자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셨던 것은 아닌지?

▶ (진술인) 배우자한테 제가 분석한 종목이나 또는 제가 분석하지 않은 종목이라도 이야기한 적은 없었음. 배우자 역시 첫날 주식 산 것을 보면 OOOO와 OOOOOO 그리고 OOOO 종목을 산 것으로 확인을 하였음. 그날 지수가 코로나19 이슈(issue) 때문에 사상 최대로 100여 포인트 이상 빠진 날이어서 OO증권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회사에서 계좌가 몇 십만 개씩 개설된 날로 알고 있음.

○ (위원) 배우자에게 보내준 돈은 얼마를 돌려받으셨는지?

▶ (진술인) 원금 그대로 다 돌려받았음.

○ (위원) 돌려받은 시기는 언제인지?

▶ (진술인) 2020년 3월에 제가 대여를 했는데 약 10개월이 지난 2021년 1월경에 원금 약 2억 3,000만 원을 돌려받고, 그때 대출받아서 준 것인데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여전히 저는 대출 상태로 남아있음.

○ (위원) 금감원의 문제 제기 이후에 원금을 상환받으신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로 인해 이익이나 손해가 났는지?

▶ (진술인) 이익이 났음.

○ (위원) 이익이 난 것은 배우자께서 가지셨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언뜻 듣기에는 대단히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로 보이는 함. 왜냐하면 주식거래를 전혀 해오지 않던 배우자한테 금투업계에 계신 분께서 본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2억 3,000만 원을 보내주고 그날 거래를 한 다음에 계속 거래를 해오다가 금감원에서 문제제기를 한 시점 이후에 그 주식을 처분해서 원금을 돌려받았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거래 관계 같은데, 그전에도 이

런 식으로 해 오신 적이 있는지?

▶ (진술인) 이런 식의 거래는 처음이었음. 저는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예민한 업종인 OOOOOO에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 내규상 펀드 또는 해외주식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어 있고, 배우자는 펀드나 ETF 이런 거래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래서 펀드나 ETF를 가입한다고 해서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져있으니 펀드나 ETF는 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다고 해서 대여를 했음.

○ (위원) 방금 말씀하신 주장을 검찰수사과정에서도 주장하셨을 텐데 그것이 배척되고 기소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저희가 수사단계에서 그 부분을 다 말씀드렸음. 공인인증서 관련 사실관계는 저희 진술 이후에 확인하였습니다마는 나머지 사건들 다 기소하는 김에 이것도 굳이 빼지 않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피의자가 총 6명이었는데 OOO OOOO와 제재대상자 2명만 불공평하게 기소가 되고 나머지는 다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임.

○ (참여자) 대출받아서 배우자분께 대여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대출 형식이나 담보는 어떻게 되는지?

▶ (진술인) 전부 다 신용대출을 받았고 그 후 2~3일 뒤에 배우자한테 보냈음.

○ (참여자) 큰 금액을 아무런 주식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께 대여했다는 것이 저희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납득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함. 주식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데 경험이 없는 분께 그런 큰 돈을 맡겨서 ETF든 뭐든 투자를 맡길만한 위험감수 수단이냐 그런 것이 있었는지?

▶ (진술인) 주식 투자였다면 그런 거액의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 그런데 펀드를 가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신용대출 받아서 줬음.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시 지수가 단기간에 폭락을 하였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투자자들이 아주 많은 계좌들을 개설해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펀드에 가입했던 시기임. 그래서 고액이기는 하나 펀드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배우자의 의견에 동의하여 신용대출을 받아 대여했음.

○ (참여자) ETF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펀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지?

▶ (진술인) 어떤 펀드나 이런 것들을 가입하면 좋으냐고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지수 관련 펀드에 가입하라는 그런 정도의 조언을 주었음.

○ (참여자) 배우자께서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해보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 ▶ (진술인) 배우자가 주식 투자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드나 ETF 가입을 한다고 얘기를 했음. 그리고 그 당시에 증권계좌가 하루에 100만 개씩 개설된다는 뉴스기사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펀드 계좌를 개설할 시기였음.
- (참여자) 그런데 갑자기 배우자께서는 지수나 대형주들에 직접 투자를 하셨는데, 진술인에게 사전 협의나 자문도 구하지 않은 채, 왜 그렇게 하신 것인지?
- ▶ (진술인) OOOO, OOOOOO 같이 초대형주, 시가총액 순위 1등, 2등 주들은 펀드나 ETF나 똑같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음. “남편과 직무관련성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고 했더니 그 정도는 본인도 알고, 직무관련성 여부가 전혀 없는 종목들이어서 투자를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음.
- (위원)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한 곳만 실명으로, OOOOOO에 근무하면서 펀드조차도 가입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진술인 명의로 금융투자회사 주식 계좌 같은 것이 있는지?
- ▶ (진술인)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해외 주식이나 ETF 까지를 저희가 못하고, 펀드는 할 수 있었음. 그래서 제

명의로 펀드가 여러 계좌 있었음. 저희 ○○○○○○에서
했던 캠페인을 전제로 한 펀드들에 가입된 것들이 있음.

- (위원) 본인이 직접 펀드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도 있고 회사에서 캠페인까지 하면서 하는 것인데 왜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배우자에게 자금을 보내서 투자한 것인지?

▶ (진술인) 제가 그렇게 고액을 펀드에 넣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당시에 배우자가 저한테 강하게 펀드에 가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였고, 제 이름으로 했다면 당연히 배우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없으니까 저에게 대여받아 배우자 본인이 직접한 것으로 생각함.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액의 자금을 본인이 신용대출 받아서 투자경험이 없는 배우자한테 줬다는 그 진술 내용이 상식에 반하고 내용 자체가 와닿지 않아서 진술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움.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안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처리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 (참여자) 배우자가 본인한테 얘기도 없이 왜 갑자기 주식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 합당한 진술이나 변명이 없는 것만 보아도 이것은 본인의 계산으로 본인 자금을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맞아 보임.

- (위원) 제63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하는 재판은 차명으로 했는지의 여부이고, 그렇다면 결국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서 내려질 것이고, 그것을 참고해서 제2호, 제3호 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조사권한만 가지고 있는 행정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재까지의 조사내용 그리고 진술인의 진술내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제2호, 제3호의 위반이 있었다고 증선위에서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무리가 없을 것 같음. 굳이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혹시 뒤집히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유로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미루거나 한 전례도 있어 보이지 않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도 않음. 진술인의 태도에 대한 판단,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금감원의 조사 결과 입증에 대한 판단을 이 정도로 가지고 있다면 굳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조치를 원안대로 하고, 설혹 만에 하나 재판 결과가 그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원처분을 취소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 생각함.

- (위원장) 그렇다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의견진술을 두 분이 하셨는데 그 두 분의 의견

진술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원안에 증선위가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음.

- (위원)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의 내용에서 법 문언에서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은폐 대상인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가 무엇인지?
- (보고자) 위법한 거래는 펀드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서 부실 CB를 사전약정에 따른 0원으로 평가하지 않고 부실CB를 고가에 매매한 거래, 그것을 위법한 거래로 봤던 것임.
- (참여자) 첫 번째 지적사항인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금지 위반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적용 법조와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맞추어 보려고 하니까 과연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가 어떤 것인지, 감추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감추어진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적용법조에 해당하게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좀 더 보완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함. 두 번째 지적사항인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관련하여 어떤 내용의 세미나였는지를 각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음. 그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인 투자광고 부적정 부분과 관련해서 건수산정이 기존의 안건들과 동일하게 산정된 것인지가 의문임.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일자별로 건수를 보되 동일 적

원의 동일한 수신인, 동일한 펀드나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된다면 여러 건의 발생이라고 하더라도 증선위는 1건으로 인정을 해주었음. 구체적인 위반건수를 저희에게 보여주면서 왜 이런 건수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함. 그리고 여섯 번째 지적사항인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반사실을 밝혀 주셨으면 함.

- (보고자) 알겠음.

○ (위원) 과태료 10억 원 이상의 초과분은 감경하는 것으로 처리하셨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 (보고자) OOOOOO(주) 투자광고 부적정 관련해서는 광고대상 펀드 중에 OO·OOOO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거의 없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보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서 과거의 선례에 비추어 결정하였음.

○ (위원) 이전의 사례와 일관성이 충분히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참여자) 그 감경사유도 안전에 남겨놔 주시는 것이 좋겠음. 그리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과 관련하여 형사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건이기 때문에 그 적용법조를 현재 제63조제1항까지만 되어 있는데 제2호까지 해당법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이 건은 형사사건과 별개의 지

적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고, 관련 제1호 위반으로는 이미 형사처벌이 되었거나 형사재판 진행 중이라는 것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함.

- (보고자) 반영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20호 『농협은행(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금감원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동기는 ‘중’으로, 위반결과는 ‘중대’로 판단하였음. 녹취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건은 위반동기 ‘중’, 위반결과 ‘경미’로, 일부 건에 대해서는 위반동기 ‘상’, 위반결과 ‘경미’로 판단하였음.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은 7억 9,500만 원으로 예정하였음. 먼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의견임.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설명사항이라고 정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 설명서 교부의무는 비교적 완화된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즉, 사모펀드의 경우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내지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고객확인서 형태의 설명서를 교부하였음에도 그 일부 내용의 미흡함을 들어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됨. 농협은행(주)은 고객확인서 교부와 더불어 제안서에 기초하여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했음. 금감원은 고객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투자설명사항을 적절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였으나 농협은행(주)은 상품제안서를 토대로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고객확인서를 교부하였음. 고객확인서에 기재된 투자설명사항이 제안서에 비해 다소 간략하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제안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그에 기반하여 고객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것이므로 금융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은행(주)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고의로 설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유인이 전혀 없음. 고객확인서 형태로 설명서 교부 자체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규율하기는 어려우며 그 내용상의 미흡은 ‘경과실’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동기를 ‘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됨. 금감원은 본 건이 금융거래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위반결과를 ‘중대’로 판단한 것 같음. 그러나 ⊗⊗⊗⊗⊗⊗⊗펀드의 경우 이탈리아 현지 상황 및 운용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지 고객확인서 내용 부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특히, 현재 50%

선지급이 완료되었고 올해 자율조정을 통해 사실상 투자자의 손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위반 결과를 ‘보통’ 또는 ‘경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다음은 녹취의무 위반에 대한 의견임. 농협은행(주)은 녹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녹취를 시도하였음에도 녹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임. 농협은행(주) 해당 직원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적으로 고객보호를 위해 다시 한번 녹취 스크립트를 읽어드리며 녹취를 진행하였다는 점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협은행(주)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고의로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유인이 전혀 없음. 녹취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녹취를 시도하였음에도 녹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경과실’로 평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농협은행(주)은 ☆☆ ☆☆☆☆☆☆☆☆☆ 펀드 등 현재 문제되고 있는 펀드들에 대해 관련 투자자 전원을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통해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농협은행(주)은 투자자 피해 보전 등 사후수습 노력을 인정받아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관경고’에서 ‘기관주의’로 감경을 받았음. 이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꼭 감안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과태료 부과 사안과 관련된 이 펀드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이 지적이 되었는지?

▶ (진술인) 본 안전 ☆☆ ☆☆☆☆☆☆☆☆☆ 펀드 관련해서는 펀드의 기초자산인 헬스케어 매출채권 투자에 따른 위험이 왜곡·축소 설명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였음. 다만,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볼 때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객들한테 안내를 드렸던 부분인데, 환매연기가 이루어진 현재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볼 때 좀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감독당국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증 의무까지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 저희 의견을 소명할 바가 있었음.

○ (위원) 제안서를 토대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교부 의무를 이행했다는 취지이신지?

▶ (진술인) 저희가 주의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어떤 사항이 구체적으로 설명서에 기재되었는지가 규정상 명확하지 않고, 고객확인서 내용을 토대로 설명서를 교부했기 때문에 교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임. 설사 고객확인서에 모든 내용을 다 담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서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설명서를 교부를 했으나 그 내용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경과실’로 보는 것이 맞다고 예비적 주장을, 이렇게 2가지 주장을 하고 있음.

○ (위원) 설명서 교부를 할 때 설명서에 기재되어야 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또는 설명서 교부의무의 취지에 비추어봐서 사전적 또는 사후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금감원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

▶ (진술인) 저희가 현시점에서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앞서 저희 법률대리인께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규정과 제도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저희가 사후적으로 확인했을 때 고객에게 사모펀드 설명의무, 교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이 판매사별로도 각각 차이가 있었음. 저희 농협은행(주) 같은 경우는 상품제안서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객확인을 받기 위해 고객확인서라는 별도의 양식을 보완장치로서 사용했지만 그 부분이 내용상의 미흡 등으로 감독당국에서 지적을 하였음. 비록 내용이 미흡하기는 했어도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런 방식을 썼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녹취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녹취를 시도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녹취를 시도했었다는 사실 자체는 입증이 가능한지?

▶ (진술인) 직원의 구두 진술과 고객확인서의 진술로 저희가 확인을 했음.

○ (위원) 고객이 녹취를 시도했다고 확인해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검사국에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저희가 동기판단을 '상'으로 한 사안은 애초에 녹취 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사후확인서를 징구한 바가 없고, 동기판단을 '중'으로 본 사안은 고객이 녹취 자체는 당시에 진행이 됐었다는 사후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음.

○ (위원) 그러면 녹취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는 조치 수위에서 감안을 하신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참여자) 상품설명을 하실 때에는 상품제안서를 이용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참여자) 그렇다면 상품제안서를 그냥 고객에게 주면 될 텐데, 왜 그것을 주지 않고 요약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고객확인서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지?

▶ (진술인) 고객들에게 더 간명하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아쉬운 결과가 나타났음.

○ (참여자) 고객확인서를 어떤 특정부서에서 작성하는지 아니면 상품판매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알아서 작성을 하는지?

▶ (진술인) 운용사에서 저희한테 제공한 상품제안서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이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의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했음. 그렇지만 최종적인 전결권자의 방침을 받고 나갔던 자료라고 답변을 드림.

○ (참여자) 지금은 혹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지?

▶ (진술인) 사모펀드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 이후 감독당국에서 사모펀드 설명서의 기준 마련 등 새로운 기준이 본 안건의 상품설정 시점 이후에 도입이 되었고, 현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출시 과정을 개선하였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해당 건의 경우에는 ◇◇건의 가입금액이 ●●.●억 원인데, 위반결과를 ‘중대’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

- (보고자) 교부의무 위반 자체는 각 개별 판매건별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함. 펀드 자체의 전체적인 판매규모로 볼 때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개별 교부건으로 봤을 때는 각각 개별 펀드마다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고 개별적으로 그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중대’로 판단을 했음.

○ (위원) 말씀해 주신 취지도 이해가 되는데 과태료 부과기준

에 따르면 언론에 공표되어 금융업계의 공신력 실추,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집합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기준처럼 보여서 여쭙본 것임.

- (위원장) 제120호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주)이 사모펀드 총 ◇◇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제안서의 내용 일부만 임의로 발췌하여 부실하게 작성된 “고객확인서”만 투자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농협은행(주)에 대해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였음. 금융감독원은 본 건 위반행위의 동기를 “중”으로, 결과를 “중대”로 판단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였으나, 농협은행(주)이 설명을 위한 자료 일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자료를 추가로 작성하여 배포한 점, 여타 펀드의 경우 동일 프로세스로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지적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한편, 판매규모·과급정도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반결과를 ‘중대’로 판단하기도 어려워 보임.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해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위반결과는 ‘중대’에서 ‘보통’으로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그 외 다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16시36분 정회)

(17시03분 속개)

□ 의결안건 제121호 『티에스텍(주) [개별, 연결]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27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2021년도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처리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28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2021년도 감사반에 대한 감사인 감리 처리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29호 『회계법인 새시대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를 일괄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30호 『자산유동화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정비방안 보고』, 보고안건 제31호 『모집·매출시 조합원 확인 관련 제도운영 개선방안 보고』를 일괄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7시 43분 폐회)